

중수청 초대 수장에 김지용… 여권 반발에도 임명 수순 돌입

李, 여권 일각 반발로 추가 검증 지시
“결격사유 없어, 청문회 소명 기회”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오늘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 끝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일 “금명간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여권 일각의 거센 반대 의견에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쳤지만, 인선을 철회할 정도의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은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국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23명 가운데 민간 외부위원 중심의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추천위는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 등 4명을 추천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운데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 및 거센 반발이 나오자, 이 대

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성기훈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

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 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 재고 성명 참여,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및 채널A 사건 처리 등을 들며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성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가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파악했다. 또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재고 성명 참여는 ‘절차적 하자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며,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

건은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지만, 당시 서울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 기소했다고 파악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김 후보자의 경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채널A 사건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시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도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라면서 “탄약 하위임을 알면서도 흡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힘 “준비 안 된 중수청… 졸속 출범 강행”

중수청 앞서 현장 의원총회

국민의힘은 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출범 준비가 미흡한 중수청을 ‘강통’에 빗대며 졸속 출범을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60명 이상의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고 ‘근조(謹弔) 형사사법’이라고 쓰인 영정 형태의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죄 인사를 하며 행사를 시작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수청은) 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강통 중수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수사 뺑뺑이, 사건 압장이 일상이 될 것”이라며 “강통 중수청, 강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여기 와 보니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며 “아직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 기관의 수장인 중수청장도 공석이라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도, 공소청장도, 경찰청장도 공석

이다. 이 정권은 검찰을 때려 부숴 놓고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중수청 1차, 2차 임용 신청자를 모두 합쳐 봐야 전체 정원의 68%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수청은) 출범하자마자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검찰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중립성·독립성에 오히려 역행하기 때문에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남북 군사긴장 낮추는 조치 지속”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자주국방·스마트 강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 남북이 대치 국면인 가운데,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또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 역시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레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기념사 서두에 DMZ에서 지뢰 사고 피해를 당한 장병들을 향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아울러 ‘자주국방’과 ‘강한 국군’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국방 개혁과 스마트 정예강군 도약 등 강군 혁신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며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겠다”며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재차 밝혔다.

/서예진 기자

산안법 개정안 통과… 부동산 입법은 담보

산업재해 반복 사업장 제재 강화
부동산 법안, 여야 이견으로 처리 지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는 머뭇거리는 한편, 산업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막판에 입장을 선회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벌이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는 과도하다며 과징금 상한(캡)을 씌울 것을 제시해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저회로서는 이 법을 미룰 생각이 없고 국민의힘 주장이 과징금에 캡(상한)을 씌우자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기

업이 얼마되지 않고 10여개가 안되는 기업을 보호하자고 이를 미루자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산안법 개정안 표결 전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기준을 최근 사례에 대입하면 시공능력 2위의 모 건설사는 2020년 중대재해로 인해 등록말소 대상”이라며 “땀흘려 가족의 생계를 잇는 현장 건설노동자 수만명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치다”며 “경제를 견인하는 두 반도체 회사의 영업이익은 350조원과 2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업장에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면 그 규모만 30조원이 넘는다.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며, 정도와 방지 노력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부과한다. 기준도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이라며 “마치 수 천억원, 수조 원을 부과할 것처럼 호도하면 법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두 달 가까이 부동산 쟁점 법안 처리를 노리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접점을 찾지 못해 담보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한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일 본회의서 처리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도 13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민간 사업자의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에도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이 반이 감지되자 8·17 전당대회 전부터 민생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주요 쟁점 법안으로 꼽힌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쟁점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몇 차례 순연시켜 정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지도 우려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